

<순서>

6.15 공동선언 2주년과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과제 . 6.15시대 조국통일 실현 경로에 대해(시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 6.15 공동선언 2주년과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과제

2002-05-26 평민권 남북부

6.15 공동선언이 합의된 지 2주년이 되었다.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을 가름하는 각계각층의 각각이 점차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 2주년을 돌아보고 향후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과제를 언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6.15 공동선언의 이행 과정

#### 1) 민족 공조와 외세 공조의 각축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6.15 선언 제 1항이다. 6.15 선언 1항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통일문제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약속했다. 이는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근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6.15 선언 이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라 할 수 있다.

6.15 선언 직후 새롭게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조미간의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한편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태도와 견해를 나타냈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4차 장관회담에서 남북은 북에 약속했던 전력 재공을 거부했다. 정세현 당시 통일부 차관(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미국은 2001년 2월 금강산 관광 댓가로 북쪽에 지원한 4억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회담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휴직을 내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의 내각 간섭의 정점은 3월 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을 시시하며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01년 봄경계로 내외의 기대를 모았던 통일장세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은 호전적인 태도 강경책으로 통일장세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미국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군비 강화를 조성하고 있고 이북을 '악의 축'이라 지칭하며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공작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위급 수순을 넘어 서고 있음을 뚜렷히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탈북자 소탕', 금강산열 봉쇄, '괴선탄' 인양 등의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국은 수단,방범을 가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반북과 대북을 격화시키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수구반통일세력의 준동과 함께 6.15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 정부의 중요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6.15 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조선일보, 한나라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6.15 선언에 대한 조적적인 제약을 내리기 시작했다. '파주기문'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의 저항은 마침내 2002년 5월 22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6.15 선언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구보수 세력의 저항은 2002년 대선을 거나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또한 민족 공조와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서 끊임없이 이탈함으로써 스스로 모멸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노골적인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며 6.15 선언을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조건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국민 대중, 7천만 겨레의 힘을 받고 대담하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에 나서는 것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시종 저자세를 일관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의 대중적 동력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45 입원된 특사 방문시에 김대중 정부가 보여 준 '민족 공조'와 한미일 동맹체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요지의 설명은 김대중 정부의 처지가 얼마나 용서할 위치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인도적 사안과 교류협력의 확대

2000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 하나의 형제임을 느끼게

1

불과 1-2년만에 전개될 다음의 두가지 변수가 향후 수십년간의 역사를 좌우할 것이다. 첫째는 2003년 조미 제네바 합의의 둘러싼 조미간의 각축과 둘째는 2002년 대선을 포함하여 남북에서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의 확대 발전의 정도이다.

2003년 조미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접점의 수준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세가 수단 방범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과 대결을 격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철저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파들은 탈북자의 기밀명명을 조강하고 '괴선탄'의 인양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하에서 아마도 군사적 차원의 대결 양상이 예상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탈남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대결 노선을 완화하려는 노력 또한 구해되고 있다. 조중, 조미간의 관계가 급진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중동력을 연결하는 반미 패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과 이북과 유류연합간의 관계 발전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남북에서의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 또한 향후 정세의 중요 변수이다.

통일장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에 반응하여 남북 대결을 부추기려는 친미보수우익세력과 평화공존, 화해협력력을 주장하는 중진 세력,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지향하는 자주통일세력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정세는 민주와 개혁, 보수와 수구라는 전선이 하나의 전선이지만 이 전통적인 전선과 함께 점차 통일장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위전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22 관공클럽 토론회에서 통일장의 발원인 2002년 대선을 단순히 서민대 귀족, 개혁대 보수, 구도 아닌 통일장세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장(정략)이 표현된 통일과 수구반통일이다.)으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의도이다. 민주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 또한 수구세력인 관점에서만 지지해 대선에 임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반미반권 운동을 대중화하는 한편 이를 연북대단결 의의으로 지향시켜야 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접어 든 반미반권 운동을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확고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이북이 한민족, 한동포라는 대중적인 교양 사명을 광범위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리키는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정치 공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결사의 각오로 외세의 민족 분열대결 기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하는 투쟁의 경우 두가지 방향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세력과의 연대와 연합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와 개혁에 경도되어 자주통일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양자는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이를 여하히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가 운동 역량의 우세를 보장하고 수구보수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운동의 성패는 6.15 공동선언으로 집약되어 있다. 6.15 공동선언은 일민족, 일국가를 지향하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고 이 기구를 무기로 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비약적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북에서 수구보수 세력을 제압하기만 하면 속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순탄한 궤도를 타고 전진하게 되어 있다. 모든 운동을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운동으로 집약시키며 특히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식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 3. 글을 맺으며

정세는 엄중하고 상황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반면 승리와 격동의 가능성 또한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부시반권 반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반미자주통일운동의 성장은 조만간 반미자주통일운동의 대중적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맹목적인 냉전 대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는 지나갔다. 자주와 통일, 민주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의 성장은 이미 역사의 대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기세와 역량을 하나의 통일된 역량으로 결속할 수 있다면 통일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6.15 선언의 위력과 영향력이 바로 이것이다. 6.15 선언은 통일로 가는 궤도를 대단히 가까운 곳에 옮겨다 놓았다. 6.15 선언을 기치로 가까운 일남에 조국을 통일하자.

## 6.15시대 조국통일 실현 경로에 대해(시론)

2002 평민권 민족통일권 수련회 자료집

해운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대체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0526적인 민회소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도적 과제는 미송환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 문제는 정세 상태에 있다. 철도 도로 연결 구상, 임진강 수해 방치 대책, 동해안 어항 개발, 금강산 : 활성화 등 수반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최근 주목되는 경향은 여전히 남북간의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은 남아 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남북과 함께 리시안을 연결하는 일련의 철도, 도로 연결 구상은 해당 사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나 경제적 파급 효과로 :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급성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지역적인 차원의 경제 협력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일련의 우여곡절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000년 10월 북측 조선노동당 55등 행: 남측에서 42명만 참여한 대 이: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의 부문별 교류와 함께 2001년 민족통일대토론회, 민족통일대토론회 등의 행: 연이어 벌어짐으로써 남북의 민간 차원의 연대연합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측에서 반미 의식이 고조되고 이: 대한 대중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조만간 대중적인 추세를 자리잡을 것이다.

### 3) 통일방안을 둘러싼 각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판

6.15 선언의 기조 곧 특징의 하나는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일 것이다. 남북의 최고 지도부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 연합제의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 가자'고 합의하였다.

다소 모호한 문투로 되어 있는 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담고 있다.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모두 사, 외교권 등 국가의 핵심 권한을 각각 남북이 갖되 남북을 연결하는 느슨한 기구를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족의 합계안은 위 기구를 연합기구라 규정하며 할 것이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를 민족통일기구라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전: 후자의 차이는 전자가 TWO KOREA 상태라면 후자는 ONE KOREA 상태이다. 전자가 민족 공조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은 : 한 문제하고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실사 남북이 현재 조건에서는 느슨한 기구로 유지되더라도 민족적 지향과 자: 두었기 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다. 전자의 입장이 어떻게든 미국과 국내 기독교권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채 북의 반: 기대하는 발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후자에 따르면 민족통일과정에서 미국의 관계 설정권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 민족공조나 외세의존이나 하는 6.15 선언 1항의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판 문제는 외세의 내정 간섭과 함께 거의 쟁점에 대해 남북이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 될 것이다.

## 2. 6.15 선언의 진로와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과제

### 1) 6.15 공동선언의 진로

6.15 공동선언은 중국적으로 1항의 원칙, 민족공조의 원칙이 관철되는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민족통일기구가 건설되는 : 로 귀결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현 상태를 반영하여 군사, 외교권을 남북이 각각 갖지만 일민족, 일국가를 대표하는 중앙기구로,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 민족 공조의 원칙이 확인되면서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기구, 출현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 지만 조국통일국민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는 남북의 정부 당국자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구성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통일기구는 6.15 선언 1항의 원칙이 관철되는 기구이므로,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민족의 공조에 반대하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야 하며 둘째는 민족의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보수수구세력을 제압하고 ' 공조의 원칙에 동의하는 통일지향적인 남북 주체가 출현해야 한다. 따라서 6.15 선언의 중국적인 리정으로서의 민족통일기구의 출현: 전으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는 민족주체 세력을 건설: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2)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과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2002년 I

통일애국정당의 담판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전면화해 나가자 III

글 순서 :

1. 조국통일 실현방도에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의미
2. 6.15공동선언의 파격적, 주동성에 대한 이해는 조국통일 전면화를 위한 사상이론적 기초
3. 6.15 공동선언의 의의
4. 15선선 전변화의 정세적 배경
5.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6. 연방 연합방식의 통일실현과 진전을 위한 조건
7. 2002년 통일애국운동진영의 대응에 대하여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조국통일의 길에는 우리가 목숨처럼 들고 가야 할 조국통일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이 있 : 조국통일은 본질적으로 보면,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 의 지혜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7천만 전체 민족이다.' : 조국을 하루빨리 일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이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을 회복하여 강위력한 통일민족대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 다.

이 글은 두 가지 실천적 이유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나는,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정세의 주동성과 그 이행의 절박성을 감안함으로써 2002년의 운동을 보다 확신되고 전망성있게 변: 가기 위함이며,

하나는, 6.15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실현의 파격적 경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6.15시대에 변혁된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 수합해 나가기 위함이다.

6.15공동선언은 정세관점에서 운동방법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넓고 심오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많은 일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요구하는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이고 세계적인 이해의 부족함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내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6.15시: 변화된 요구는 운동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시론적 성격의 문헌임을 밝히며, 6.15정세가 가져 온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운동의 개선·강화를 위해 읽는 토론이 전개: 를 중심으로 기대한다.

### 1. 조국통일 실현방도에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의의

1) 10.12 조미공동리무니케이션이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노선과 민족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민족방위이다.

2) 6.15 공동선언은 현 시기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촉진과 조국통일의 실현력이 있는 역동적이고 상징적인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의 방법이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민족구국성원간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말라하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을

0526

2

쳐 통일 의문을 열자는 기저 아래 전민족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을 말한다. 조국공동성명의 발원지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계의 공동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구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6.15공동선언의 파격성, 주동성에 대한 이해는 조국통일 전변화를 위한 사상이론적 기초

1)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맑은 상호 통일방안의 공동성에 근거하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보다는 더 이완되고 느슨한 방안이다. 그러나 연방연합방식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를 논쟁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의 출발점에서는 제도상의 형태보다는 통일의 역동성을 담아 내고 민족 통일 국가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나이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방연합방식이란 정치·외교·군사 등의 권한을 남북 각각이 대체로 갖고 있으면서 우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다방면적인 민족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하나의 민족통일 기구를 수립하자는 말이다.

통일방안과 제도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정치·외교·군사 등의 권한을 지역정부가 갖는가, 아니면 통일중앙정부가 갖는가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또는 통일기구)가 민족사회의 대한 전국적 범위의 지휘권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정부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얼마나 갖느냐에 의해 규정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차이를 규정하는 관건적인 것은 남측정부의 성격이다. 한마디로 말해 남측에 거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낮은 단계로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안정화 노동3권 보장,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리증진, 전보제강화 등의 자유, 자주정치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대립하고 갈등한다면 높은 단계로의 이행이 더디게 된다.

2)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실현 경로의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 ----- (6.15공동선언의 파격성)

종래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측의 민주자유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각종 외세군주둔의 일소, 반통일악법과 기구의 철폐, 민생민권의 민주정치실현, 각종 불평등 국제조약의 폐기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연방제 연방제 실현의 전제로 되어 있었다. 또한 연방중앙정부 수립에서 전민족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경로와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족연합, 민족공조를 통해 가장 빠르고 쉽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즉, 일정한 과도기를 전제로 한 연방연합방식(2001년 2월 별민권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정식화된 개념)의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전민족적인 민족연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전 민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즉, 민족자유정권수립 → 연방제 실현의 경로가 아니라 6.15공동선언 2항에 근거한 민족통일기구의 수립 → 남측에서의 자주민주정부의 수립 → 높은 단계의 통일로 이행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 실현 경로의 변화는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민족민주운동영역에 6.15이행운동을 전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6.15시대에 적합한 반미운동의 관점과 형식의 변화는 대단히 첨예한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이 갖는 정세와 운동의 주동적 측면은 무엇인가?

많은 일꾼들이 6.15공동선언에 대해 공감한 것은 왜 남측에 자주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연방연합방식(북측의 표현으로 하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으로 통일을 하려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관련 실력 가능하였는가의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1)

즉, 연방연합방식에 따른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은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및 미국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간섭, 정권합성, 각종 불평등협정 등 미군에 의한 분란의 정치사적 지렛대를 제거하고, 반통일악법과 기구, 주주력, 외세군주 등 반북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철폐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민족통일기구수립에 참여하게 되는 남측정부는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며, 민족공조에 나서는 최소한의 통일지향적 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리고 국소수반통일분열체제를 제외한 대다수의 6.15공동선언 지지세력들은 광범위한 민족역량으로 편제되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

- 5 -

소련이라는 상대가 없어진 탈냉전적 상황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명분과 적들을 개발하여 일극패권주의를 강화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이 내일 우리의 머리위로 떨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개입과 전경확대로 일관하는 미국의 호전확대야말로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침략성을 경계하는 동시에 허장성세하는 취악성을 동시에 간파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북아 정세의 방향타는 이 북동포와 이남의 진보적 애국세력에게 쥐어져 있다.

7천만이 단결하면 우리 민족은 그 무엇보다 능히 해낼 수 있다.

이남의 식민화가 더욱 심화·전면화되고, 이북 무력화 책동이 절에와 되며, 한반도에 대한 세전쟁쟁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정세적 조건에서 7천만의 단결된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최고의 동력원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전쟁쟁들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확로를 보장하는데는, 7천만의 단결된, 이북의 선군주노선, 조중·조리연대의 강화, 반미반전의 국제적 연합과 여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유지하고 강화해주는 근간이 6.15공동선언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당면시기 가장 힘있는 전민족투쟁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동북아시아의 반미전선을 지탱하는 기본정치임점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조국통일전선과 동북아 반미전선을 동시에 사수해내는 관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6.15공동선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민족대단결의 형성, 반미반전을 위한 전민족투쟁전선의 공동기치
- ② 미국의 일극패권주의 분쇄를 위한 다극화·국제적 반미반제투쟁전선의 기치
  - 반미반제권을 위한 조중, 조리 관계의 지렛대
  - 국제우호친선관계의 전방위적 지지

## 4. 6.15전선 전변화의 정세적 배경

세계가 새 전쟁체통에 중지를 찍고 산속참화로부터 민족구원의 길을 개척하고, 외세간섭의 사대제국으로부터 자주평화주의의 운명을 밝히며, 반통일분열의 악순환으로부터 대단결의 새조국을 건설하자는 7천만의 절대결명의 의지가 동북아 정세를 자주로 변화시킬 움직여가는 기본 역량이요, 확고한 중심이요, 우두 서자이다.

오늘의 정세는 7천만의 강력한 대단결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7천만의 단결된 반미반전투쟁전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에 용여민기회와 힘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세는 조국반도에서 조국통일전선(=6.15전선)의 위력성과 정당성 그리고 현실의 절박성을 강력히 입증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민족공명이나 공론이나, 통일이나 분열이나, 자주나 완전된 예측이나를 가르는 절대결명의 목전에서 자주와 대단결의 확고한 기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바, 여기에 바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할 전민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 5. 연합계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동성

1)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는 남북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각료회담, 남북 의원들이 만나는 남북 평의회 등을 묶어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공화국연합계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2국가 1연합기구 형태이다. 남측의 연합계이던 대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임을 의미한다.

김대중정권의 공화국연합계(1 연합기구에서 연방제(1연방정부 2지역정부)로 가는데는 다당제, 자유선거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랜 분열을 인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북 북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며,

하고 강제해 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남측의 자주화를 앞당기며 자주민주정부수립의 역동적인 계기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일 것이다.

4)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한 정세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민족역량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2)

90년대 조미관계의 총결산은 10.12 조미공동공표유니케에 집약·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민족자주노선의 승리인 동시에 미-전략적 패배를 의미하며, 결국 통일의 문제는 민족민주문제를 자주적 해법인 오직 통일인 문은 열리게 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선행정권의 정치적 합의를 백지화하고 힘에 의한 대결정세를 강화하는데 단기간을 쓰고 있다. 정세는 긴장되고 엄중하나 6.15선언의 전민적 기치를 높이 들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굳건히 한다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스러운 민족통일대행진을 결코 막아 수 없다.

5) 6.15선언은 연대연합운동의 중흥기를 가져 왔다. 특히 중간세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연대연합운동의 개선·강화를 하게 함으로이다.

###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3)

민족역량의 압도적 성장과 정치적 향상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주체적 조건형성의 첫째가는 과제다. 이는 어떤 통일운동에 노정되, 민족대단결의 환경에서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 운동의 전면적 쇄신과 강화를 주동적으로 불러 온 총적 활동방향이 된 것이다.

6) 민족의 자주권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주인답게 살 수 없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기로하며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은 미·일 제국주의이다.

이 땅의 경제식민화와 민생파탄, 부패정체, 양키책세권화가 판치게 한 주범도 미·일 제국주의이다.

미일 의제가 4천만 이남 민족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인 동시에 7천만 민족의 융성·번영한 통일조국 건설하는데도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할 때, 4천만의 힘이 더 세가 아니면 7천만의 단결된 힘으로 물러 내는 것이 수월한가? 당연히 족적 투쟁이 더 힘있고 더 수월하다. 조국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족자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전민족적 관점과 전국적 관점을 : 야 하는 전략전술적인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5공동선언은 이 땅에서 외세를 물러내는데 전민족의 공동투쟁전선을 다 펴고 다 있게 구축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4)

7) 조국통일의 전변화는 이남 사회변혁운동 발전의 모든 정치적 조건(이남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전진시킬 수 있는 정세적 조건과 기 등) 및 독자성을 중시하면서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무엇보다 앞세우고, 전민족적인 자주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관점, 태도와 운동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전민족적 호소어래 '민족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략서 책관정세의 유·불리를 뛰어 넘어 조국통일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치아래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 각계각층의 정치적 연합을 이루는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이는 것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앞당기기 위한 운동으로 되는 것이며, 이는 이남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민권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거대하게 된다.

## 3. 6.15공동선언의 역할

2000.10.12 조미공동공표유니케는 90년대 조미적들을 우리 민족의 승리로 마감한 역사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부시의 등장은 역사적인 전과 승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가져 왔다.

테러박멸을 앞세운 아프간 침공은 전세계를 전쟁의 회오리로 격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를 거쳐 이북으로의 확전의 가능성성을 :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지배주의와 팽창주의를 관철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우선시 6.15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2단계안을 폐쇄하고 있다.

<b>6.15공동선언 2항</b>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계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계안인 서로 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나가기로 하였다.
<b>김대중정권의 연합계 (1단계 : 1연합 2정부)</b>	현존하는 남북의 두 정부는 독립국가로서의 권한, 즉 외교, 국방, 내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양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대표를 파견하여 공화국 연합기구를 구성한다. 공화국 연합기구의 임무는 3원칙(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한다.(91년 4월)
<b>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b>	1민족·1국가·2 제도·2 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
<b>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b>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80년 10월 10일)

2) 91년 북의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는 문제로 협의의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이 2000년 10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건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현재의 남북 북 두 정부의 정치·군사·외교·군·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북은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계안인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 개의 제도·두 개의 정부의 4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후에 민족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 6.15 선언 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계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 합의하였다] 남측의 연합계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동성이란 남북 북이 각각 외교, 군사권 등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에 상당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급 차원의 대화와 논의의 틀을 제도화하는 형태상의 공동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대대로 6.15 선언의 결정은 남북 북이 외교, 군사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4)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전후한 국면에서의 민족주체역량의 역동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조국통일이던 남북 북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제한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초기 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을 대표하는 단결된 민족통일기구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조국통일의 길을 강력하게 추동 할 것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족통일기구의 제한성이나 과도성, 불완전성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민족통일기구의 역동성과 전망성에 실천적 무게를 실는 : 이 중요하다.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은 남북당국대화의 정례화, 전변화를 우선 가져 올 것이며, 화해와 단합·교류와 협력을 위한 각 분야의 합의대로 될 것이다. 자주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각종 정치군사적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군측은, 비롯한 주한미군의 존재문제와 초미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각종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

- 6 -

주한미군 관련인 수많은 피해사태(인명, 재산, 환경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보상요구운동이 끊임 없이 일어나 것이며, 민족통일기구 운영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관철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민중의 민주, 민생인권 확보투쟁과 결합하여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 정권과 남측 각계세력들과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거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도하고 지휘하는 것은 범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적 요구와 정세적 힘이다.

이 정세 시기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기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만파황창의 기세로 될 것이다.

5) 범민권의 강령·규약 개정은 몇 가지 개념상의 변화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범민권 운동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이다.

6.15공동선언을 범민권의 총적 활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의 폭넓은 대단합운동을 벌여 내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연방연합방식의 통일 실현과 진전을 위한 조건

1) 내용을 중간정리하면, 민족통일기구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하며,(통일국가로의 1국가성을 완전히 갖지는 못한다.)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및 남북당국사이의 대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며,

대체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서의 상징성과 지향성을 강력히 선포하게 된다.

2) 연방연합방식의 실현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무엇보다 선행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적 합의에 따라 민족단합과 공조의 편에 서야 한다.

3) 주적론의 폐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등 6.15공동선언 이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

4)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의 남측 조직정치적 기초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남 통일애국운동전선의 정치적 단합과 합의수준을 각별히 높여야 한다.

5) 반미(철수, 군축, 평화운동)의 전략적 경로를 견지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불 때 주한미군철수의 청사진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철수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는 전략적 영역과 군중을 의식·계몽화하고 조직하는 선술적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에서의 반미운동은 전민특위, 미군법령근절, 기지반환, 환경요법, 인명·재산피해보상, 한 미행정협정, 토지사용료 부과, 주한미군분담금 폐지, 통일운동 방해금지, 전력·관광 등 민족협력사업에 대한 간섭 중지 등등의 다양한 실천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 긴장구조·전쟁해동 분쇄와 조미공동규슈니케의 이행 등의 전략적 기초를 견져야 한다. 6.15시대에 걸맞는 반미반전운동의 전개가 요구되는 것이다.

## 7. 2002년 통일애국운동전선의 대응에 대하여

1) 6.15공동선언 이행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

2) 운동대오의 단합의 승리의 관건이다.

3) 주세력량의 강화와 편승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 9 -

① 한총련, 한청 등 조국통일의 선봉부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② 노동자, 농민, 민간의 생존권투쟁과 자주통일운동의 결합을 강화하며 전민족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③ 범민권과 전국연합의 지지협력관계에서 협력적 연대로 강화해야 한다.

④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역할분담론을 극복해야 한다.

⑤ 중간계층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연대연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⑥ 행사발 추진본부의 수준을 넘어 범국민적 통일운동기구로 발전시켜,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

⑦ 통일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⑧ 범민권 조직의 일상성을 강화하고, 범민권 활동을 개선·강화해야 한다.

⑨ 범민권의 합법화를 실현해야 한다.

4)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6.15지지·이행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민주운동전영 일각에서 나타나는 6.15공동선언이 실증·무력화·사문화되었다는 견해를 단호히 극복하여 운동의 지성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이남의 지사제 선지, 대선 등의 국면에 대한 적극적 대응속에서 친미보수세력을 고립시키고 6.15공동선언행과 자주화·민주화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전체운동전영의 공동행동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 전진화물 이르는 전민족적 방침이며, 이남사의 자주화를 선도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6.15공동선언행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가로막는 제반 정치적 걸림돌을 일소하는 부쟁으로 모든 통일민주세력들은 공동동행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통해 진 민족의 자주권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이남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를 영영히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일 제국주의로부터 끊임없는 정치 군사적인 간섭과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가장 원천적인 부분을 복구하거나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 과하다. 조국통일의 전진화란 주체적 역량과 주어진 정세 조건에 기초하여 더 빠르고, 더 현실성있게 진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해 나갈 수 최선의 방도를 말한다.

6.15공동선언 이행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외세배적 민족중조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단결만이 살길이다. 모든 운동세력은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총단결하자!

범민권 합법화 실현하여 연대연합의 새 건설기를 불러오자!

]

##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2002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 1. 6·15 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민족정신이 민족단결의 기초로 밝혀져 있으며 연방연합의 공동성에 기초한 통일실현의 경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만 6·15 공동선언은 진술적이거나 부분적인 선언이 아닌 조국통일을 실제로 실현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연합의 공동성에 기초한 통일실현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연방제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중앙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가지며 지역정부는 상호체제를 인정하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연방제란 2국가에 기초한 협력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정부가 갖고 상호 협력기구를 구성, 교류와 협력을 추

- 10 -

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방연합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민족통일기구를 두고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운동을 한다는 점이 일단 구상된 민족통일기구가 처음부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점차적으로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 중앙정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족통일기구 구성은 1민족 1국가의 출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면 조국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 6·15 공동선언에 제시된 연방연합안은 민족통일기구를 통해 하나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안이라고 하였습니다.

## 2. 연방, 연합 통일의 경로

일반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전민족이 힘을 모아 남측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대민족회의(가)) 같은 것을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민족회의(가)가 책임지고 전민족적인 선거를 진행해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기관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연방의회, 행정기관은 전민족을 대표하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방, 연합 통일은 민족통일기구를 먼저 구성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을 지역정부가 갖되 이를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방, 연합 통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장상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연방, 연합 통일이 제기된 것은 전민족적인 힘이 미국을 압도해 가는 조건에서 어떻게든 빨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며 낮은 단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민족주체의 힘에 대한 믿음과 정세에 대한 낙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기구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적 원칙에서(조국통일 3대원칙,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 운영되는 중앙기구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는 남북 정부간 협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 구성은 주되게 남북정부로 될 것이며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의 자주적 단결이 이루어져 튼튼한 민족적 지반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관계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정선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내외분열세력을 타당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제로 민족대통일전선 구축, 민족중조 확립을 위한 주적론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남측에서 자주화, 민주화의 진전, 북미관계 발전(북미평화, 주한미군철수 협의)의 진전이 제기되며 이것이 실현될 때 민족통일기구 구성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며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시작할 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로서 통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 구성과 운영이 시작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주어지며 핵심적인 문제는 주권기관 강화와 중앙정부로의 정치, 군사, 외교권의 집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통일기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대표할 수 있지만 전민족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을 강화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민족회의(가)가 열리고 이의 책임 하에 전민족적인 총선거를 통해 연방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족대통일선에서 망라된 정치세력이 합동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 속에서 정치, 군사, 외교권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남측의 자주화, 민

주화이 과제 역시 중요하게 나열되고 하였습니다.

대민족회의(가)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로 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소집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편 대민족회의(가) 의제가 주권기관 강화가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면 민족통일기구 수립에도 열릴 수 있을 것이며 민족적 단결 강화와 이후 대민족회의(가)를 통한 주권기관 강화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것입니다.

\* 대민족회의(가) 역할: 주권기관 강화인가 민족통일기구 수립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설 수 있는데 이 같은 주권기관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시론적 글임을 밝힙니다.

### 3.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관계

자주적 민주정부는 남측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 등을 망라하는 애국민주세력이 주축이 되어 자주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부로 당면해서 한국 민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권형태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자주,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목표로 하며 자본주의체제를 아작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형식 정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민족민주전선과 합법정당이 필요합니다. 민족민주전선과 합법정당의 관계는 민족민주전선에 합당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족민주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량으로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서 전 민중적인 환경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경로입니다.

사실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더라도 그 운영은 자주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남측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측에 보수정권이 있다고 해도 자주통일운동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자주화,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채택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절대적 조건이라기보다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를 얼마나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관건적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면 남북의 단결과 자주적 권리가 확보됨으로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더 앞당기려는 명화합니다.

### 4. 2002년의 과제

그렇다면 이를 위한 2002년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위한 6·15 공동선언 실천과 함께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민족민주세력의 태세를 준비하는 문입니다.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위해서는 민족통일주체역량 축성과 남북관계 진전을 주도의 궤도에서 힘있게 진행해야 하며 북미대결전에서의 리를 확고히 정취해 미국의 개입, 간섭을 격파해내고 주적론, 국가보안법과 같은 분단의 법칙, 물리적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큰 대선을 친미보수정치를 청산하고 6·15 지지세력의 승리를 쟁취해 6·15 공동선언 이행을 더 본격적인 궤도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6·15 공동선언 이행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 민족통일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로까지 진전되어 나갈 것임으로 조국통일을 선포하게 될 날이 가시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미보수정권 전반을 갈아엎고 민족민주세력이 주동이 되어 대

3) 연방연합에 기초한 통일이 진전되더라도 민족민주세력은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며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민족통일기구에 보수정권이 참여하는 경우 의제의 지배와 간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남북대결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독자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4)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이 현실화되기 전단계 반통일외교압박이 철폐되는 등 합법적 공간이 넓어질 것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5) 강력한 자주통일운동으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달성해 나간다면, 보수 정권하에서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통한 자주화, 민주화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 운동의 총극적 귀결은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하였습니다.

서 6-15 공동선언 채택의 승리를 생쥐하고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통한 자주통일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족민주세력은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여러 정치세력과 연대를 단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당면 민족민주세력의 단결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주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확대해 강한 민족민주전선구축과 합법적당 건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2년 과정을 총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자주 기해, 6-15 공동선언의 기해 아래 단결된 전민족의 인력으로 남북관계 전진과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바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생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이후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 기해로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중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과제로 민족대통합전선의 구축과 대민중회(가)에 대한 준비,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 및 민족민주전선 형성 등이 요청되며 대중운동과제로 단결과 대중화, 6-15시대에 걸맞는 범국민적인 운동의 창출이 요청됩니다.

<순서>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한반도 통일과 여성  
여성과 통일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속초 새 할미바가 점 6.25 전쟁

##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 도쿄, 서울, 평양 토론회를 중심으로, 김유옥(도론회 실행위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공동주최,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제2차 세미나 주제 1 / 1993

### 1. 들어가는 말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일반운동과 마찬가지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모순과 질곡들의 주요인인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강대국의 이념적 대결로 빚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은 경제적으로도 남북간의 괴리감의 과잉증폭으로 여성들의 전투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평행한 군사주의의 화로와 성폭력화 및 인제가 난무하는 불평화적 여성들의 삶을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접어들어 분단구조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실실천의 해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급격한 질서개편 앞에서 유일한 분단구조는 남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열망이 되었다. 이러한 열망을 위해 활동하던 남북한의 진보적 여성지도자들은 이른바 양성파 여성들을 대가로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창시하였고 도쿄(1991.5.31-6.2), 서울(1992.11.25-30), 평양(1992.9.1-6)을 돌면서 '토론회를 가진 바'이다.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여성들의 인식은 이 토론회에서 일치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토론회에서의 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여성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 결론으로 우리의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 2. "통일과 여성"에 대한 남북의 주장들

#### 2-1. 남측의 주장

제1차 도쿄 토론회에서는 분단구조의 극복을 위한 역할로 내빈적 분단인식의 변화와 국부, 군주운동, 교류(이해), 군사주의의 철폐에 대치되는 여성문화의 창출, 다양성 증진, 조화와 협력의 공생사회, 구조, 평화, 자유, 시대를 바꾼다(운동(이유적)) 등을 제시했다. 2차, 3차 토론회에서는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이같은 교수가 나타났다. '한민족의 통일'을 주제로 했다. 그는 통일의 주체로서 "자주, 평화, 통일"을 내걸며 "이질화"된 민족을 전체하고 "서로 다른 두 체계가 얽혀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로 되는 바탕을 잘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개방, 교류, 협력의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부분에서 공명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측의 연방제안을 파도기의 방안일 뿐 궁극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념과 체계가 다른 연방제안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론

- 13 - → 여성이 왜 통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 14 -  
→ 군사주의의 철폐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 "여성들의..."  
→ 여성들의...의 대립...

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은 조국통일과 민족화 관련되는데 "자주, 평화, 자유, 시대를 바꾼다"를 극복하는 일에 7천만 겨레가 힘을 합쳐야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민족내부에서는 오히려 통일을 해체하고 화해하는 일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민족대통합은 "조국통일의 근간을 이루는 곧 그 정치적 내용을 이룬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통일은 "민중적기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사는 민족대통합 선언"이라는 것이다. 남북통일의 화해조건은 그 자체가 민족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내성적인 불가피 조건과 협력교류협정도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남북과 북측에 대한 위구성을 없애고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가능성이 지" 현실은 아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은 과제를 거두는데 7천만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민족대통합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드럽고 다정다감 이해하고 동정심이 많은 것으로 서로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바르지 않는" 조정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들은 분단으로 인해 남자들이 더 슬픈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상이나 이념은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이익을 첫머리에 놓았던 전통들을 열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3차례 걸쳐 실현된 것도 여성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는 숭고한 의사이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단결할 수 있다는 확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호소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힘이 있으나 자주 만나고 싶어, "우리 여성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나는 것으로 된다"고 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형제도 힘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하며 온겨레의 마음 속에서 장벽이 허락되지 않아 민족대통합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 3. 통일에 대한 남북여성들의 인식의 차이

#### 3-1. 여성이 통일의 주체라는 인식의 근거문제

통일운동에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북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는 대체로 남측은 "성평등을 위해"고 강조하면서 "특성"(도론에서 이호제)이나 여성성(이유적)을 내세우고 있고 북측은 분단으로 제일 고통받고 생활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정명숙, 강순금)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남측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서는 정명숙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선명할 고착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남성성을 내세워, 착취의 짐을 씌우는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들은 남측과 같은 것을 통해 성차별을 반대하는 남성이나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과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만들거나 광범위한 연대들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 3-2. 여성현실에 대한 이해

남측은 군사적, 경제,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과 차별화해 있는 여성들의 한(恨)을 설명하며 분단극적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장 문화나 군사주의 문화, 이원론적 가치관의 영향 하의 여성현실을 토론해 때때로 언급, 이에 따른 여성운동의 발전을 설명했다.

북측은 도쿄부터 평양까지 일관하여 여성들의 해방된 현실을 내세웠다. 도쿄에서 이원화 대변은 "남조선여성들의 자주, 민주, 평등을 위한 운동은 위하하며 여성의 존엄이 깎아지른 채로 있는 사실에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허덕이는 현실을 면하여"고 여성의 참된 해방을 이루려는 투쟁"이라고 전제하면서 "공화국의 여성들은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등에서 해방되었고 여성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여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공화국 여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중추적 권리를 얻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교육에서 평등하며 인사부나 모성사업은 급진적이고 사회진출에 대한 모든 조건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보육과 교육문제에 완전히 해결되어 있고 전국에 6만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거미줄같이 퍼져있고 사회적 평가도 남다른데다가 1990년, 여성영웅 200명, 50년간의 산산천천 후가치가 보장되고 100% 인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평등한 권리와 보장이 여성운동은 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정명숙 대변은 같은 논조로 공화국의 여성운동은 특수한 여성문제가 해결된 바탕에서 일 반적 운동 즉 민족통일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3-3. 통일방안의 문제

남측은 이같은 교수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방안, 하나의 제도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방안을 설명하게 그러내지는 못했다.

북측은 3회에 걸쳐 연방제안을 설득력 있게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남측의 할리적이고도 비판적인 토론을 기다리는 태세였다. 북한은 통일방안은 50년대까지의 자주적 총선안, 60년대의 민족적 조약제 연방제안, 70년대의 고려연방제안, 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제안 등으로 변화해 왔다. 연방제안이란 남한의 "두개의 한" 정책을 대항하여 "하나의 조약"을 내세우는 방안이며(사) 문제 해결을 통일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다.

1990년 5월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조정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북한은 자국의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군사분계선과 양측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여성들의 방언에서는 북측정부의 방안 기조가 정권이라는 점이 우리에게서도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합성의 용"이라는 개방성은 있다고 하니 남측의 합의를 촉구 도출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고 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는 이념체제가 달라도 "같은 쪽으로 물고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평양에서 이호제 대변은 "민족대통합" 부분에서 통일의 3대 기본방안을 "자주, 평화, 민족대통합"로 전제하며 지금까지는 주로 의제를 양한 지어 민족대통합의 초점을 두어왔고 그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간선면 부분, 즉 계급/계층/종교로 분열된 민족 내부의 단결도 고려하여 힘을 모으겠다. 민족대통합이란 "소유와 권력의 불평등 분배"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족내부 계급/계층/종교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대통합과 평화와 자주는 서로 연관되는 한 몸이며 민족대통합을 이룬 민족은 "새 민족"으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토론회가 이끌어 왔던 남측의 통일운동 인식은 단순히 남한 내의 사회적, 이념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의 통일정책은 일반적으로 각각 지한 입장과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2000년대의 "민중화합민주통일론", 계급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대중의 "공화국국민방안", 문민화국의 "3대제 통일방안", 김대중의 "3대제 통일방안"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통일 내에서도 남한 전체의 주인인 유리한 국내의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과 압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홍수통합)을 이루자는 주장과 현대적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흡수통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정도 특단의 경제력이 성장한 다음에 흡수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화에서도 아직 정례적 기조라기 보다는 그 하위단계에 불과한 방안들이 지중된 남한의 통일정책의 공은 가운데서 여성운동 자체의 통일방안은 전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울 뿐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1차 세미나에서 정명숙 교수가 지적했듯이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안에 반대만 하지,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수세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정명숙 교수는 "여성운동의 통일정책은 민주화, 사회체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통시적인 해제의 과제를 거머야 하는 데 연방제안이 될 수 없을 없지않았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2-2. 북측의 주장

북측은 도쿄토론회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분방하고 일관된 연방제안을 주장했다. 서울토론회의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남측 여성들이 각자 자기 정부의 대변인만 한 것 같으니 다음에는 여성들 자신의 방안을 내놓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평양에서 다시 남측 북측은 여전히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도쿄토론회에서 정명숙, 리영진 대변은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을 문제삼으며 전쟁위협을 억지할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제, 연방제 통일방안이 바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숙은 여성들이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1995년을 통일일정의 해로 정했는데 아직 민족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개탄, 제도의 통일과 연방제의 두 방안이 있으나 통일을 평화적으로 부담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인 연방제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통일은 흡수통합인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제도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토론회에서도 정명숙 대변은 우리 민족은 "이질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4천만 다른 제도에 살아있으나 민족적 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통일문제 해결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제도는 사회적조건에 더불어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연방제는 "상대방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결 단화하고 통일하는 것"은, 통일이 유지하려면 누구의 제안이든 현실적이고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50명씩의 대표가 같이 있는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거기서 순순하고 소박한 협상, 누구를 고집시키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여성들이 함께 조국통일방도를 모색하고 확정할 "민중통일정치협상회의" 조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북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중통일정치협상회의"도 제안했다.

평양토론회의 "민족대통합" 부분에서 강순금 사회과학연구소 "민족이란 민족의 언어, 영토와 문화, 신의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일체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화국인 집단이며 수반과 국질을 갖춘 민족의 단합을 특색의 강조성을 띠고 있는 집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분단된 우리민족이 대단결을 하느라 여부에 민족의 존재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도시와 길주의 마포, 영변의 약산단과 전주의 장조지를 바꾸고 함경도 치너리와 수성 총각, 전라도 치너리와 평안도 총각이 서로 시집가기를 오고거꾸로 의욕을 삼아왔고 일간제 때까는 부산의 동산에서 평화가 울려퍼진 연이어서 수만과 오 개에서 타락은 두 개가 해치는 싸움에 밀려 나갔고" 하고 회상, 이러한 민족은 의세에게 국권이 굴복당한 현실에서 민족대통합에 같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더욱이 강대국 때문에 분단된 이후 47년간은 남북양쪽 격벽되어 살아오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서로 간에, 신적, 적대적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분별시켜 놓았던 것은 제국주의 성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조선에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통일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세"를 명분으로 일부 세력 고국의 이간책자를 편승하여 민족 내부에 대립을 고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순금의 민족대통합이란 "한 거레로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 화해하여 단합하여 단일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사상과 이념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 다져야 할"

#### 3-4. 민족이익의 문제

남측은 민족간의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로 내세우며 사회주의 교육과 자본주의 교육을 받아온 "이질화된 민족"이 서로 신뢰회복 할다는 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원사상과 공동체주의는 맑은 한반도 언어의 이질화가 이념의 지기로 있는 민족이익에 걸려있다. 이질화가 없어야 민족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

북측은 "이질화는 없다"고 부인한다(정명숙). 다만 이해와 편견이 있을 뿐이고 47년간의 제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성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을 우위에 두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는 의세에 국권이 굴복당한 현실에서 민족간의 이질화되어서 민족대통합을 중요시하며 민족을 사회적 생명체, 제제는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3-5. 평화의 문제

남측은 평화의 문제를 특색있게 설명하는 편이다. 핵이나 군주문제도 언급하나 전쟁위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 폭력체제를 평화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북측은 평화의 문제를 "전쟁반대"라고 분방하고 주장했다. 도쿄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미군기지의 철수 핵무기 철수로 비핵화 하는 것, 뒷조사와 같은 외국군과의 위협적 군사적 압박, 그리고 서울과 평양 두번에 걸쳐서 "조선전쟁협상회의"는, 분산, 이 사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정명숙, 조순금) 조순금 주장은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초점을 전쟁반대, 대 단결, 무장투쟁 반대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조선반도는 현재 대비판, 대대수가 부강력에 있어서 세계의 유혈을 찾아볼 수 없이 거대한 무력대포에 대두"되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방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정치, 실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기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형성되고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 현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대립상태가 참예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이 중지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3-6. 국제적 실천의 문제

남측은 평화의 문제, 민족, 군주운동, 국부비 폐지, 통일이나 선방운동, 교류, 상대방을 올바르게 알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북측은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평화구축, 군비의 단계적 축소, 한반도 비핵화, 군사훈련 중지운동, 교류와 연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3-7. 우리의 과제와 전망

이상과 같이 3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과 인식의 차이를 간주려 보았다. 여기서 알기로는 통일운동과 토론회를 위하여 우리 남북여성들의 합의가 어느정도는 도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토론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보충, 수정되었으면 한다.

#### 4-1. 합의의 문제

전국적 여성운동의 합의로서 통일방안이나 이에 따른 정책적 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 으며, 예로 연방제안을 기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 여성의 삶을 위한 사회진출의 정책들 구체 적으로 제시하며 주장, 관철하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결적 당위성이나 분단분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의 한민족 통일방안에 대한 실천특성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 4-2. 남북 국내대론의 확산

합의된 여성들의 통일방안 초안이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등을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통일운동인식을 확산하며 통일이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참여민주주의 여성운동의 연대모델이 될 수 있다.

#### 4-3. 국제적 실천

- 1) 앞으로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활용
- 남북여성들의 합의된 통일방안을 위한 도출
- 서로를 서로의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 중간위원회 구성에 대해 남북여성들이 공동으로 연담할 수 있는 시안의 발과 연대 운동
- 다양한 계층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동
- 2) 양측 정부의 "합의서와 무충합서"의 국제적 실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ㄱ씨 집에 해방 직전에 시집은 새데 'ㅇ씨 할머니(79세, 양양군 출신)는 궁경이 되어 월남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기뻐했지만, 안방까지 내주고 나니 화가 났다. 안방이 아들 나옴된 장교의 젊은 애첩이 차지했다. 부역이나 행사 동원은 왜 그리도 말든지, 길 뉘는 다,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며 수시로 젊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인공 시절(38년이 복한 관할시기)에도 여병 회비를 내야 했는데만, 군경 시절 부녀회원비는 배로 뛰었다. 아이들 학비도 처음에는 싸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인공 시절보다 비싸졌다. 모든 게 그랬다.

'ㅇ씨 할머니의 남편 'ㄱ씨 집안은 모두 빨갱이인데 남편만 월남했다. 'ㅇ씨 할머니는 빨갱이들의 주축을 받아 속속 끌렸다. 남편은 일제때 일본군 소수의 통조림공장에서 사무를 봤는데 해방되고 공산주의가 싫더라 월남해 버린 것이었다. 시누이 남편은 일제때 순사였는데 해방되고 인민위원의 청년들에게 민족반역자로 찍혀 월남하고 말았다. 전쟁 나고 시누이 남편은 속으로 돌아와 처안에서 활동하며 속초, 양양 인근의 빨갱이나 그 유가족들을 잡아 처단하거나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양양 인근의 공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양양군과 고성군과 함께 속초에도 월북자들이 적지 않았다. 속초에서 두 번째로 부자 마을이었던 논산에는 특출나게 공부한 사람이 나 사회주의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특목한 사람은 많았다. 그런데 전쟁중에 특목한 사람은 죽거나 (이북으로) 돌아가 버렸다. 인민위원장이거나 여성위원장비는 가족 전체가 들어가고 학살당한 세브위원장과 농민위원장의 남은 가족들도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인공 시절이건 군경 시절이건 마을 사람들이기 보복하며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일식적 후퇴시기(1950. 10-12월초), 월남했던 반공청년단들과 같은 '첼'들이 노동당원이던 오씨를 잡아 죽도록 구타를 했다. 그때도 'ㅇ씨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구명을 하여 살려주었다. 그 후 오씨는 인민군과 함께 월북했다.

성령 율복처럼 없고 마을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궁경과 친 해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애시당초 마을과 인연을 끊고 동해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남아 있던 사람들의 자손 중 잘 된 사람은 별로 없고 저마다 그들은 속속이 살고 있다고 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ㄴ씨 할머니 집으로 두 할머니와는 분위기가 또 다른 할머니가 찾아왔다. 'ㄴ씨의 과부 시누이 'ㄱ씨 할머니(75세)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새파를 이겨낸 사람에서서 풍기는 역세고 거칠지만 당당한 풍모가 배어 나왔다.

'ㄴ씨 할머니가 나를 소개하며 평생을 올라앉아라고 권했다. 그는 "뵈, 이런 지난 간 걸 얘기해"라며 동평스럽게 한 마디 던졌다. 'ㄴ씨 할머니가 "우리 시누는 남편이 들어가서, 잘 고생이 많았어"라고 말문을 열어주었다. "언니도 별 말.."

그는 얼마간 두 할머니와 내가 얘기 나누는 것을 듣고 앉아 있었다.

"우리 동네나 인근 마을에는 영감들이 많이 들어가서, 말랑 과부들도, 말랑 과부, 과부들이 모여 앉으면 구멍(한방)에 가득해. 노인정에 가봐. 남편 있는 여자가 몇 집밖에 안돼."

"내 얘기 들어볼라우. 나는 23살에 남편과 생이별을 했어."

<p><b>인민위원회 간부 등 속초 앞바다에 수경시지</b></p>
---------------------------------------

어느 그 도 초 우리의 아이가 속으로 들어왔다. 속초 논산리 'ㄱ씨 집안의 막내남매 태어난 'ㄱ씨 할머니는 해방된 이듬해 19살에 속초 시내에 사는 이씨(80세)에게 시집을 갔다. 논산 유지였던 'ㄱ씨 할머니의 아버지가 이씨를 고른 것은 이씨네 집안이 속초 시내 양반이고 유지였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소학교를 마치고 재경 때는 어업조합에서 일을 했다. 시아버지가 해방되어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자 남편도 함께 일했던 장정부사청년이었다. 결혼 후 몇 년간 공직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전쟁 나기 전에 아들을 낳자,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쟁이 나면서 남편 이씨는 근대 지면 물자를 만들라, 선전 격문을 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었다. 인민군의 일식적 후퇴시기에 남편은 '이내 돌아 올까라는 말만 남기고 연사부스의 시류나 물건을 챙긴 붓짐을 들고 동료들과 떠났다. 한겨울 동지날, 시아버지는 장정부사에 걸려 아프지, 간난에는 때를 쓰지, 인제 반공청년단이 들어닥칠지 몰라 무섭기 그지 없는 나날을 보냈다. 하루는 청년단이 집에 찾아와 남편을 내놓으라며 집안을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생사할 뉘를 빼놓고 그들은 다른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매마른 하늘에 총성 몇 발이 울렸다. 부들부들 떨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바람이 뜰쳐 부는 이른 아침, 얼결 여자를 몇 명 앓다.

"00만! 소식 들었어? 간방에 농민위원장이 총에 맞아 죽고, 조선소장이었던 박씨, 인민위원에서 일하던 고씨, 이씨, 김씨 모두 6명이(속초)앞바다에 수경되었다네"

그는 남편 얼굴을 떠올렸다. 남편이 후회할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죽을 자리를 피한 게 친행이라 여겼다. 아이 아버지가 살아 있기를 을 빌고 또 빌었다.

충각이었던 고씨는 요행히 수장을 면하고 돌아왔는데, 반공청년단에게 다시 걸려 기어코 군인 손에 총살당하고 말았다. 청년단들 중

## 1. 90년대 이전의 여성 노동자 운동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물론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해방과 분단이라는 사회 상황 속에서 다른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대부분 20세 미만의 여성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파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의 조건 아래에서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자연발생적인 노동 쟁의가 1920년을 전후해서 빈번하게 일어났고( 3-1 운동 이후에는 보다 조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기 시작한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은 크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주적인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주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면서, 취미 부분적으로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시켰던 1970년대는 여성 노동자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1980년대는 1970년 여성 노동자 운동 경험의 축적과 반성 위에서 독자적인 조직과 이념을 세워 나가고 여성으로서 겪는 특수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성 노동자 운동은 전체 사회 운동의 무분별 조직적 체계가 정립되는 것과 함께 비로소 노동운동, 여성 운동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범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 노동자 운동은 생산적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무직, 판매직 여성들, 전문 기술직 여성들에게까지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 1)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속에서 신용 업종 섬유, 방제, 가발산업 성장하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의 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여성노동자가 대거로 진출하게 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한 생산직 연소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44.2%) 저별 임금을 받았으며, 노동 환경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통제하에서 육질, 구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성 보호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 아래 인민간적인 삶을 강요받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던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먼저 절실하게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운동을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70년대의 유신체제 체제 아래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 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여성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 개선 운동에서부터 민주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탄압과 개입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인 투쟁이기는 했으나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던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은 수년동안 민주노조를 사수하면서 지치지

6) 사례1 목속 건 아사 투쟁
경성고무공장 여성노동자 - 여성들만의 최초의 파업 ; 1923년 임금인상의 요구를 담아 14.5세 소녀부터 4.5세 중년의 여성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아사투쟁을 조직하여 파업투쟁을 강행한다. 이 투쟁은 광범위한 사회여론을 불러 일으켜, 전국각지에서 일제의 탄압을 폭로, 규탄하는 유인물이 나오고, 연설회가 조직되는 등 지원투쟁 또한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10여일이 지난후 요구조건이 완전히 관철되고 파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 파업투쟁은 일제하 여성들만의 최초의 파업으로 노동자와 일반시민들까지 큰 영향력을 미친 사례로이었다.

사례2 최초의 공공성업 울민대 강주름 ; 강주름은 간도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하는 남편을 돕다가 남편이 전사하자 부모와 어린동생들의 생계를 도맡아왔다. 그녀는 1930년 5월 29일 평양의 울민대 평민고무공장 파업의 지도자로서 단식동맹을 조직하고 공장을 점거농성하다가 밤 1시 경찰에 의해 반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길로 40여명이 되는 울민대 다락 위로 올라가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건에 관한, 고유주의 횡포와 착취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7시간 40분 동안 버티다가 경찰에 끌려 내려져 평양에서 구속되자 이면에는 단식으로 대항하였다. 76시간 만에 사형선 2는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신입여성노동자 숙명에 가담하여 해고, 1주일 구류를 살렸다. 석방후에도 비합법노동운동으로 격렬한 투쟁을 벌인 평양노조 사건의 가담, 1931년 5월 28일 평양에서 집거, 4년을 옥중에 살다가 옥사하고 말았다. 당시 평양노동운동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직업별 노조를 탄생케한 운동이었다.

에는 815가 나고 남으로 갔다가 1950년 10월 국방군과 함께 속초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군인들의 힘과 믿고 빨갱이! 나 가족들을 처단하며 돌아다녔다. 그 유가족들은 중공군과 함께 내려앉은 인민군들이 다시 후퇴할 때 모두 (북으로)돌아가고 말았다 인민군이 다시 내려고도 들어갔으나 남편은 다시 오지도 가지도 않았다. 장정부사에 걸려 시름하던 시아버지가 이듬해 초봄에 60리지까지 걸던 'ㄱ씨 할머니는 간난애를 데리고 23살, 시집 간지 4년만에 논산 친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p><b>"우리 영감을… 싶어, 싶어"</b></p>
--------------------------------

군경 시절 얼마 동안은 밤마다 공포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편과 생이별한 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소리를 내는 한 밤도 국군들이 젊은 여성들을 검탈하고 돌아간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서부터 돌았다. 그들은 낮이면 공비 ; 작전일때, 뒤편 하면서 동네들이 일 잘드 살살히 피며버 다녔다. 논산 마을은 말한 것도 없고 군부대 인근 마을의 처녀들뿐만 아 과부들도 군인들에게 겁탈 당했다. 특히 과부집은 남편이 도망간 빨갱이 가족이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핑계로 무사할임했다.

어느 날 밤, 'ㄱ씨 할머니 집 마당에도 낫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조아조아했다. 옆에 누웠던 간난애를 끌어안았다. 그 마칠 안방 밑이 커지더니, 아버지의 헛기침소리와 함께 '제, 밤에 들어왔나!"는 호통소리가 들렸다. 그거를 몇 밤만. 아버지의 호리에 군인들은 더 이상 'ㄱ씨 할머니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번 당한 처녀들이 많았고, 어떤 처녀는 3번 이상 겁탈을 하고는 결국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얼골 고운 속춘이는 당하는 게 무서워 거지처럼, "미친년처럼 무미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은 군"이 동네 처녀 세를 들러보고 수감되었다.

그후 'ㄱ씨 할머니는 동네 일이나 세상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았다. 허다하게 있던 부녀회 모임에도 가지지 않았다. 핏덩어리 ; 데리고 25년간 콩을 갈고 바닷물을 길어 두부를 만들고 채소 농사를 지어 땅에 내다 팔고 큰아버지가 키우던 소 13마리를 팔아 기 ;도 했다. 그래서 목돈만 생기면 무조건 땅을 샀다.

"할머니, 소원 있어요?"

"우리 손주들 글 많이 가르쳐 높은 사람이 되는 거밖에 없어"

이쯤 되자 다른 할머니들이 끼여 들었다.

"허허, 진짜 소원 말해봐. (영감)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지?"

"허허허, 나는 영감을 싶어. 스물 세 살에 영감하고 헤어져서 남편 정을 몰라서, 싶어"

작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많았고 할머니는 간강하시니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끊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래지려고 화를 내는 듯 싶더니 금기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영감을… 싶어, 싶어." 낮은 목소리로 도리개질을 ; 'ㄱ씨 할머니는 50년전 악몽을 되풀이하는 듯 했다.

'ㄱ씨 할머니가 진짜 살아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남편과의 행복 이후에 전 정량을 믿고 오십 년이 넘도록 아들 키우오 가; 일으키는데 청춘도 꿈도 버렸다. 율복자 유가족이라는 '떡'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좌절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 하지 않도록.

할머니들은 헤어지기 전에 내게 구절되어온 시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붉었구나, 붉었구나. 오천 영두가 붉었구나. 미연 영두 다 따먹고, 영두머리 남았구나. 이-라-만수."

그날 밤 꿈속에서라도 'ㄱ씨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기를 빌었다.

<p><b>&lt;순서&gt;</b></p>
<p>한국여성노동운동사</p>
<p>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p>
<p>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문제점</p>
<p>IMR시대와 여성 노동</p>
<p>투쟁사례</p>

## 한국여성노동운동사

-관악 인문대 우환의 글

않고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1975년 이후로는 거의 여성들의 투쟁만이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루기도 하였다.

<p>1970년대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을 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p>
--

첫째,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어용인 각 단위 사업장에서 노조 조건 개선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운 경우들이다. 둘째, 대부분 남성 간부들로 구성된 기존의 어용 노조를 민주 노조로 바꾸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민주 노조를 결성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웠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와 회사 측에 의해 통물 세제를 받으면서까지 싸웠던 동일 말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977-1980),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로 시작된 청계천 피복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970-1981)과 회사측의 무책임한 해임 조치로 생계가 막연해진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 사에서 농성하면서 노동 문제가 단순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사회 전체에 제기했던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978-1979)7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셋째, 일반적인 노동 문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특수 문제에 눈을 뜨게 되어 그 권리를 획득해 갔던 경우이다. 노동 운동을 염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외자 기업에서 노조를 결성하여 기존임신 퇴직제의 폐지, 유급 산전 산후 휴가, 생산직 여성 사원의 승진 승급 등 여성의 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새로 운 운동의 차원을 보여준 콘트롤 데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976-1977). 기존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해 수유 시간을 유급으로 따내어 기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 조합 투쟁에 동참시킨 삼성 계약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과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은 부족했다.

### 2) 198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

<p><b>(1) 1980년대 전반 여성 노동자 운동</b></p>
---------------------------------------

1970년대 말 20년간 지속되어 온 유신 군부 독재가 무너지던 80년 봄에는 일시적인 정치적 이완기를 맞이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고양되면서 노동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5·17 이후 출범한 제 5공화국 정권은 노동 운동에 대해 한층 폭력적이고 탄압적인 정책을 펼쳐 노동 조합의 경제적 해산과 노조 간부들의 축출, 구속 등의 사태를 불러 왔다. 정부는 기업주들과 결탁하여 노동 조합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 왔던 민주노조들(청계 피복 노조, 원종 노조 등)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점차 사회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동 운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대한 마이크로 전자, 가리봉 전자, 대우 이베릴, 협천, 유니전 등에서 힘겹게 새로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또한 1985년 6월에는 대우 이베릴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하자, 구로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노조 탄압에 맞서 개별 사업장들을 뛰어 넘어 연대 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사업은 결국 천여 명의 해고와 40여 명의 구속으로 끝났지만, 1970년대 기업별 노조의 고립 분산상태와 개별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운동이 크게 고양되고 노동 운동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 운동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의 맥을 이어가면서 저절하게 세워졌던대로, 여성으로서 겪는 특수한 문제

7) YH는 개발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개발이 사업산업화되자 사장의 의회도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모 노조가 생기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79년 문을 닫았지만 폐업을 통고해 왔다. 여성노동자들은 폐업결의를 요구며 투쟁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청계대, 계동대, 계부대, 은행, 정방 등 모든 곳에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유급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민당투쟁을 찾아갔다. 여성노동자들은 신민당사에서 정방당국은 ? 호희투쟁을 적극 소반할 것, 여성노동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조종은 명은 YH무역을 은행행원체제로 인수할 을 요구하며 9일 투쟁을 펼쳐 농성 하였다.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전해지자 여성노동자들은 투신조와 활북조 나누어 결사투쟁을 전개하였다. 수백명의 기동경찰관이 들이닥치자 인 1조로 10여분 만에 전원을 언행, 3명을 숙하였다. 이 과정에서 21세의 미혼여성노동자인 김경숙 열사가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은 60년대 이후 투쟁적 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첨예한 형태로 투동으로 나타난 사건으로서 각계에서는 이 사건을 규탄하는 기도회와 시위투쟁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부마항쟁에 이어 유신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또한 김경숙 열사의 추모 집회는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창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들은 노동 운동의 실현 과정에 제기하는 못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노동 운동을 중심으로 이끌어 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결혼과 함께 노동 운동을 떠나 가정에 안주하게 되어, 운동의 경험이 80년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고,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노동 운동 내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 운동의 본질을 거저오며,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이루어지는 모습 또한 찾아 볼 수 있었다.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여성의 특수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단결하고 그 요구를 하나씩 실현시켜 나갔다.

또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되었거나 결혼으로 인해 잠시 현장을 떠나왔던 여성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각 지역에 조직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는 70년대 민주노조사수 투쟁의 중심이었던 선배노동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설립당시에는 현장투쟁 지원과 교육, 선정을 중심으로 활동해나오며 설립되었다. 따라서 87년 이후 여성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전문여성노동단체들의 활동, 또한 여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활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2) 1987년 이후 여성 노동자 운동의 특징**

1987년 이후 전개되는 여성 노동자 운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어 운동의 대적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이다. 직종별로 볼 때에는 1970년의 생산직 여성 중심의 운동에서 87년 이후에는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여성들도 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87년 9월 한국 여성 민주회사가 창립되어 사무직 노조의 여성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그들의 활동을 적극 추동해 내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나이 어린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80년대 들어서는 한층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인들까지도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리 푸라이 해판, 한국노조, 나무 정렬 등)

87년 이후 여성 노동자 운동은 크게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보호라는 세 가지 큰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로 1987. 12. 4 남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자 그동안 현장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법적 권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87년 이후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고용평등을 위한 투쟁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도 계속되었는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자본측은 휴폐업, 공장 이전, 핵심간부 해고, 집단해고 등으로 대응하였고,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장기간에 걸친 투쟁 및 처지가 같은 노동들 간에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9년 이후 집단해고, 폐업은 여성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노동자는 휴폐업 및 대량감원은 노조 탄압의 수단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소위 부산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신발업에서 일한다면 부산의 신발업은 1988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하락현상을 겪어 노조가 없는 상태거나 어용노조 하에서 휴폐업과 공장이전, 영세화에 따른 경영 곤란, 실업을 겪었다. 90년부터 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단순히 노조 탄압 대응이라는 방편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응 활동을 들어갔다.

87년 이후 여성들의 특수한 문제를 적극적인 투쟁 과정으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모성보호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사하여 화학물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와 정책 요구 활동 전개하고, 노동조합 단체인 여성모 보호 조항 마련하는 활동 및 생리휴가 폐지 반대운동을 벌여 내었다. 여성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활동을 전개하여 탁아법 마련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과 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조항을 확보하여 이를 정책대응 하기 위한 투쟁도 시작하였다.

이렇듯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여성 노동자 운동은 여성들의 특수 문제를 다양한 노동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동시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임금·노조 조건 개선 문제 이외에도 고용 문제, 모성 보호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성과를 냈었다.

**2. 9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과 여성 독자 노조의 건설**

되찾은 운동을 전개하였다.

**(2)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민주회는 87년 창립된 이후 여성노동단체, 고용평등추진본부 등을 운영하며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을 해왔다.

① 87년~93년 사무직 여성 노동자 운동의 구축

노조 여성부 지원활동 강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운동지원, 영세 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회원조직

② 90년~92년 전문성 강화 및 여성 특수과제 실천

성차별적인 제도과 관행의 철폐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실천지침 제공, 차별입고 소송을 통한 사회 여론화, 차별적인 인사제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여론화 및 대응방집 수립

③ 93년~95년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정책 연구 역량 강화

조사연구기능 및 정책 역량 강화, 노조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생리휴가 및 모성 채용시 용모제한 고발 등을 통한 사회여론화, 파견법제정 반대운동 등 여성노동정책과 법제도 개선운동 집중

④ 96년~98년 풀뿌리 여성노동자운동의 전개

고용평등 추진본부 발족, 여성노동정책 모니터링 및 여성유선전화 반대운동, 신규입직 대책 활동, 지하철 성추행 방지 방송, 동신상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차별적 의식, 관행, 문화 개혁을 위한 활동

**(3) 여성독자노동조합의 건설 - 건설 배경과 활동**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여성노동자,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운동이 매우 척박한 기반 아래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위 IMF 경제 위기 이후의 소수의 전문직 여성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성차별적인 임금차, 여성실업자의 비경제 활동 인구화, 실업 실업자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양적인 고용통제는 여성의 실업을 비가시적으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실업대책도 남성에 기반해 입안되었다. 또한 고용불안정 아니라 여성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여성 불안정 취업층이 증가하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을 부여받지 못한 채 임금과 노동조건 모두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거나 노조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조직적인 방어막이 부재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성차별적 위계구조는 노동조합에 의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은 조직적인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처해 있었다.<sup>10)</sup>

8) 자료가 부족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점 사과드립니다.  
9) “은 나리라는 고용 위기라는 거센 폭풍우가 있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들은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 가라고, 일자라가 모자라 남자들도 쫓겨간 판국인데 여자들이 먼저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국가와 자본, 그리고 남성과 언론이 함께 등을 떠미는 것이었다. 결혼한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남자들의 기를 살려주려 하지 않나고, 어려운 메일수록 아끼고 아껴야 한다고. 여자들은 먹을 것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싸게 파는 것은 운운할 것이나더러 손수 옷도 만들고 의사와 간호사가 되 고가서 되어 분주히 뛰기 시작했다. 요구는 여기서 밀려나지 않았다. 이제 조금이라도 밥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자들은 다시 임시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다.” 『여성독자노조의 출범』 1987년 한국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의미, - 서경일주  
10) ‘87년 당초 11.1%였던 여성 노동자 조직율은 97년에 이르러 5.6%까지 떨어졌다. 15.3%였던 87년 남성노동자 조직율이 97년 14.9%임과 비교해볼 때 노동조합 조직을 하라는 여성 노동자 조직실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9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은 양대 노총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전개됐고 동시에 여성 노조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비정규직화된 것에 대항하여 여성독자노동조합을 건설한 것을 특징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침체 요인으로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제도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대기업 중심의 자본 축적 구조,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 시장 유연화 전략, 형식적 민주주의,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인 한계와 남성 중심적 노조의 조직 운영방식,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활동의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꼽는다. 9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는 90년대 말 건설된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와 한국여성민주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독자노조의 건설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의 창립을 필두로 현재 8개 지역지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마산, 창원, 전북, 부산, 안산)를 두고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이하 현여노협)를 건설하고 있다. 현여노협 10년사에서는 10년의 활동을 크게 다섯 갈래로 정리하고 있는데, 민주노조 투쟁의 물결과 함께 한 활동, 여성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활동, 탁아활동의 모범을 세우기 위한 활동, 새롭게 개척한 지역부인활동, 국제연대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기별로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창립 당시 여노회는 대적적인 여성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여 민주 노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노동조합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 개발사업에 대한 투쟁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전노협의 발전에 따라 노조 지원의 역할에서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위상을 새로이 설정하고 독자적인 여성노동운동 단체로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해고, 폐업이 잇따라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 여노회의 중심사업이 되고, 이전 사업장 단위의 투쟁 지원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요구하고, 평등법에 따른 성차별 해소 방안, 양자 정책 요구 등 법적, 제도적 정책여건 및 획득이라는 차원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 전국적 발전이 꾀해지고, 여성운동단체연합을 통한 여성운동 연대가 강조되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중 운동 진영이 재편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력이 급강하고, 일부 지역에서 여노회가 해산 또는 휴업을 하였다. 여노회는 다시 한 번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위상을 정립할때 시·기·문 여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인의 조직화 방침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생애주기기 미혼의 여성노동자, 결혼과 임신 후 퇴직하여 전업주부나 가내노동자, 다시 기존의 여성노동자로 위치를 바꾸게 되므로 생산현장과 지역을 결합한 조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라,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조직사업이 확대되고 여노회의 지역적 확대와 전국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현여노협이 결성되었다.

96년 이후 현여노협은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단위의 정책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재정 중 정부 프로젝트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고용안정 확보부쟁(비정규직 문제, 파견법 제정반대 투쟁), 평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여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책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대응을 활발하게 펼치던 것이 그 예이다.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실업국면에 대한 대응을 통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98년 6월에 여성실업 대책본부가 발족하였고 여성실업 정책 요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취업과 미취업의 사이를 넘나드는 여성들과의 대중 접촉운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확장되었다. 한편 그동안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의 성과로 고용보험법 등 고용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시직, 계약직, 용역직의 확대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극심해지고 파견법 제정 반대 투쟁이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근로 여성부담기본계획안이 발표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정책적 공방이 윤행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99년부터는 비정규직의 기본권,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평등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선전과 정책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 고용불안 문제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 기본권 확보 등의 이슈를 제기하고 법제도 개선운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여노협회의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98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 발족,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점차 증가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직 여성들의 법적 권리들

실제로 경기 부침이냐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일차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인 퇴출에 전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임시직·계약직·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의 활동방식이나 사업내용 및 방향에서 성에 의한 차별이 존속하고 있는 등 기존 노동조합의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이었다. 단적인 예로 고용안정투쟁의 대안으로 내걸렸던 노동시간단축 투쟁에서도 여성노동자, 재생산 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와 재분배 논의는 삭제되어 있었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시간 단축 방안이나 유배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고용유지를 위한 시간 단축 방안, 전사회적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시직, 계약직 등 불안정 고용층의 노동시간 재분배 및 창출된 시간안락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여성’은 배제되고 있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휴야·교육·보전 등 공공 서비스 축소에 따른 재생산 노동시간의 증대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이로써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결국 정규직, 남성,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 마련에 치우치고 만 것이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노조에 설치되었던 여성부, 여성위원회 등의 비공식적인 여성단체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던 여성독자노동조합의 예가 그것이다.(일본의 지역여성노동조합들,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프랑스의 여성노동조합(KAD) 등) 그리고, 99년 1월 11일, 한국에서는 서울여성노동조합과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sup>11)</sup>이 최초 여성 노조로 출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2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출범을 선포하였다.

이들 세 여성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업종지역노조(00지역 의류노동조합, 재화노동조합, 인쇄노동조합) 보다 지역여성노동조합이다. 여성노동조합들이 독자적인 지역여성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까지의 노동조합의 방식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출산·휴가,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고 있다. 사무직으로도 있다가 생산직으로도 있다가 주부로도 있다가 가내부업도 하다가, 자녀가 좀 크면 보육도 했다가 하는 식으로 경제활동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소수의 전문직을 빼놓는 단순한 직장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 자체가 자주 바뀌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삶의 방식에 맞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업종별 노동조합이 아닌 그 지역에서 사는 여성은 모두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역여성노동조합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여성노동조합들이 여성노동조합이 지역여성노동조합의 형태로 출범하게 된 이유이다.<sup>12)</sup>

또한 의사 결정이나 회의 방식, 단체 고집 및 단체 행동, 홍보, 문화 활동 등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의 생활 조건과 정서, 현재의 역할을 고려하여 여성의 성장과 자기존중감을 고려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하여 여성노동자의 조직력을 높이고 활동고의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방식과 내용이다.

세 노조 모두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0년 한 해 동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 발족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적권리 확보 운동,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투쟁 등을 진행했고, 사업장 회의가 결정되기도 하는 등 여러 흐름을 전국에서 만들어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90%이상을 차지하는 보철설계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중심으로 전제, 보철설계사들의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여성노동조합 또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운동, 실업자 노조 가입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동조합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들을 벌였다.

다.” - 권헌지, 『조직을 넘파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사회』, 99년 1월호  
11)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은 같은 해 7월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을 설립, 8월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 가입하였다.  
12)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여성노동자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으로 되어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실업자 여성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설립방식을 받지만 5가지 일 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 노동조합은 직종과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여성노동자들도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권을 보장해 왔던 과정을 살펴볼 때, 노동운동의 약화는 곧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해 줄 곳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 보필회사의 경우 여성의 정규직 채용은 거의 없고, 비정규직 채용(시간제, 촉탁제, 파견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급증은 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있어 조합원의 감소는 곧 노동조합의 약화를 의미하며, 회사측 대표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비정규직화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약화는 각종 여성관련 정책들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노동조건인 악화를 가져온다.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유급 육아휴직, 수유시간 확보, 직장탁아, 유산휴가 등도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강도를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과 해고에 있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시간에 노동자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35시간을 훨씬 넘는 44시간 노동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제고용대책회의 심포지움 자료집>에 의하면, IMF 이전인 1995년에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전체 시간제 노동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65.2%에 달한다. 명목상 시간제 노동자일뿐 전일제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을 일하면서, 정규직의 50%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각종 혜택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면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에게 주변업무로의 배치, 임금차별, 승진 및 승급의 차별을 가져오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무거운 이중고를 져 왔던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노동물 하찮은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게 만듦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화는 남자의 직무배치를 분리시키게 되므로, 동일한 노동력인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쉽게 하는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라는 충고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승진이나 승급도 보장되지 않는 여성에게 독보적인 전문영역을 개발하라, 부절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여성에 수행하는 경리나 단순보조 업무를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전문성 확보는 획득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일하는 보람이나 성취감, 개인의 발전 등은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다섯째,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인건비 절감효과 보다는 생산성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는 비정규직 여성의 불친절한 고객접대, 무책임한 업무처리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여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이미지가 고객의 증가와 직결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객지원 업무나 창구업무, 판매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생산성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여성들은 직업의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는 또한 전체 여성의 노동물 하찮은 일 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결과할 뿐이다.

## IMF시대와 여성 노동

이숙진 (여성학과 박사과정) 1998. 12. 31

< 다음은 이화여성학 홈페이지(http://ews.ewha.ac.kr)의 여성학포럼방 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1998년 12월 31일

최근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논의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 시키기 위한 시장과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노동 시장의 최전선에서 고용불안을 맞이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왜 여성들이 유연화의 주된 대상인가에 관하여는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참여가 고무되었다. 파트타임의 여성화는 이러한 전제와 방적으로 구축된 것이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저임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부장제가 필요로하는 여성 가사전담자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이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장기간의 성별 구조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작동한다. 결국 여성들의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성은 국내에서 IMF를 경험하는 선배대로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리 경험되었다.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정규직 보신주의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삼지않는 실정까지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문제점은 여성이 생존을 위하여 남성과 동등한 의미로 노동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 점이다.

- 37 -

1998년 12월 31일

# 투쟁사례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구체 단념자가 늘어나고 기존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저: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는 여러 통계자료들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나 최근의 IMF로 인한 실업 증가의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의 용 상황은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환위기가 있기 전까지의 실업률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는 여성실업자에 대한 배제를 기초로 이루어진: 다. 여성들에게 취업은 오래전부터 낙담자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았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기존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 만 이들은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피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사 나 취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파스 평가된 실업률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97년 3/4 분: 경우 남자가 0.1% 증가하여 2.3%, 여자가 0.6%증가하여 1.9%로 나타났다. 실업률의 증가폭은 여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체 실업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IMF 시대의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는 기존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가족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에 대해 여성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공식적 영역에서는 정력있는 여성까지 ‘: 으로 돌아갈 것’을 고무하면서도 가족 단위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벌어있는 여성’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 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비공식 부문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전역의 성장배후의: 를 통해 노동자 분리는 무차별하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저항과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1998년 12월 31일

이미 비정규직화와 고용 불안의 철단이 서있던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적 불황과 위기 상황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부활과 더: 성별분업론에 근거한 이차적노동자임을 강조하는 자본의 공세에 격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공황과 경제적 위기는 보수화를 무색질려: 국가나 자본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위기의 차방으로 사용했던 선례가 있다. 1929년 대공황시 미국의 경제법 312조가 결혼한 여성의 공직을 박탈한 사례 등이 그러하다. 경제적 위기는 공식적인 노동 시장으로부터 ‘여성’: 우선 몰아내고 주부의 역할을 알뜰히 수행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한다. 이디서든지 가장의 실력은 가족생계를 불안하게 하: 여성의 실력은 돌아갈 가족이 있는 것으로 무효된다. 기업은 공공연하게 우선 정리해고 1순위로 삼생부의 명단을 여성으로 채워가: 빨리 시집이나 가라”, “남편이 돈을 버니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 “아이 딸린 사무직 기존 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 (동아일보 98): 월 6일자)이라는 말들이 스스럼 없이 내뱉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야 아한가지이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층: 라는 지적처럼 동료 여성을 격정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듯이 노동 전역의 성장배후의와 고개를 들며 노동자: 는 무차별하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저항과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요약하자면 IMF 시대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최근의 변화는 한편으로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활과 더불어 전업주부이자 ‘: ‘있는 여성이라는 이중적 여성역할의 요구에서 찾을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부문의 남성화와 비공식 부문의 여성화에 의한 ‘: 화의 심화 그리고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을 요구하는 문화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일

1998년 12월 31